

# 장애인(장애분야) 인권교육의 이해\*

김 태 은\*\*

## I. 글을 시작하며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2009년 1월 10일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발효되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sup>1)</sup>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물론 훨씬 전부터 장애인 인권단체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노동,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실현과 자립생활, 이동권,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화 등 생존을 위한 인권운동을 진행해 왔고 이러한 노력이 법령의 제정,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비준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인권단체의 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노력은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에 대한 인권교육과 함께 진행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2001년 11월 25일)은 이러한 장애인 인권교육의 확장을 가속화 시켰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문제와 교사 또는 동급생에 의한 장애가 있는 학생(아동)에 대한 폭력문제가 사회의 주요 인권문제로 부각되면서 인권교육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여러 곳에서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권교육활동이 개별적이고,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점, 교육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이 약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 등은 여전히 교육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의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인권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강사들도 장애인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흐름, 주요 이슈, 각 당사자별 인권교육 내용 및 방식 등의 공유에 목말라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당장 교

---

\* 투고일자 : 2014. 5. 30    심사일자 : 2014. 6. 18    게재확정일자 : 2014. 6. 23

\*\* 국가인권위원회 대국민사무소

1) 이 글에서는 법률에서 규정된 장애인을 의미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그 외의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사용함.

육을 진행하는 것만큼 교육 주체 간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 중인 장애인 인권교육 중 하나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의 목적과 내용 등을 알아보고, 앞으로 인권교육 주체 간 소통과 논의의 과정에서 함께 나눴으면 하는 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II. 인권교육과 장애인 인권교육

### 1.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 가. 교육, 교육권

교육(敎育)이라는 한자는 맹자<sup>2)</sup>의 ‘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다.’란 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글자의 구성면에서 보면 ‘교(敎)’는 매를 가지고 아이를 길들인다는 뜻이고, ‘육(育)’은 갓 태어난 아이를 살찌게 한다는 뜻이다. 영어의 ‘education’, 독일어의 ‘Erziehung’, 프랑스어의 ‘éducation’은 다 같이 라틴어의 ‘educati’에서 유래한 것으로 빼낸다는 의미와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내부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내지 제6항에서 자녀에게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와 그 운영·교육재정 및 교원지위법률주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권리의 효율적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제31조의 교육받을 권리와 그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로 국가에 대하여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

2) ‘孟子’, 사서오경에 속하는 유교 경전.

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제2항은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특히 아동·청소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또는 교육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권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교육권은 실정법에 우선하여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 즉 인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관습 또는 불문법적 권리다.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히 아동에게 보장되는 성장·발달과 인격형성 및 실현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할 권리는 교육권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고,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의 성장·발달권을 충족하기 위한 기본권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기본권이다.<sup>3)</sup> 또한 이러한 초실정법적이고 기본권적인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권<sup>4)</sup>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마샬(Marshall)은 1992년 ‘Citizenship and social class’에서 사회권과 가장 밀접한 제도에 교육제도를 포함시켰고, 이로써 사회권의 내용으로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sup>5)</sup>

## 나. 인권교육

‘인권’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경험, 그리고 늘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인권(내용)의 특징 때문에 인권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인권교육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정의되고 있다.

3) 황성기, 1994,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사회권은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독일이 이끌었던 우파와 자본주의적 모순을 혁파하려는 좌파 사이에 정치적 타협으로 성안(成案)된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자유권과 구별되는 사회권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①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특성은 기존의 자유권이 국가권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구분되는 특징이다. ② 또한 사회권은 그 내용이 불문명하기 때문에 급부의 실현대상이나 방법, 수준 등에 관하여 입법자나 정부의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③ 사회권 실현을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사회권의 실현은 그 사회의 급부 능력과 의지에 의해 한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제22조(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이하에서 사회권의 명시하고 있다.

5) 홍순혜 외, 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재인용.

2004년 국제연합(UN)은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 인격과 인간존엄성을 완전히 발전시키는 것, 모든 국민, 선주민(indigenous), 인종·국적·민족·종교·언어,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적 평등, 그리고 우애를 증진시키는 것, 법에 의해 통치되는 자유 민주사회에 모든 사람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인간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에 대한 지식의 공유, 기술의 전수, 태도의 형성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둔 교육, 훈련, 정보 전달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인권교육개념에 대하여 Lister는 ‘인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에 비추어 다른 교육에 비해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 내용을 강조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을 넘어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또한 Starkey 교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권은 권리가 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인권교육은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sup>7)</sup>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권’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인권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을 넘어 개인 스스로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인격과 존엄성의 발전,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관용, 평등, 우애의 증진, 사회참여, 평화유지 등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위한 교육이다.

인권의 개념을 통해 인권교육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6) 양천수, 2011,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재인용.

7) 구경화 외, 2007,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인권 (개념)	모든 사람이 ※인권교육의 권리자(교육참여자)	사람답게 살기 위해	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권리
전제	차별금지, 평등	생명권 자기결정권	보편성 (조건 없음)	법과 제도 복지서비스
내용 (주된 쟁점)	[비주류]여자, 아동, 청소년, 소수 종교인 등, 장애인, 노인, 외국인, 흑인, 초중등교육 이수자, LGBT, 임산부, 비혼자, 기혼자 등등 [주류]남자, 성인, 비장애인, 내국인, 백인, 고등교육 이수자, 이성애자, 비혼자, 기혼 등등	자유권 사회권 연대의 권리	의무이행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	실질적 보장
공동체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책임(연대와 평화)</li> <li>- ‘책임을 다하는 것’은 나의 인권을 위한 중요한 수단</li> <li>- 모든 권리자(의무자)가 이행해야하는 책임</li> </ul>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보호 및 존중(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서 목적/방법)</li> <li>- 차별인식개선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li> <li>- 각종 (사회보장)제도 및 법률 제·개정</li> </ul>			
교육				
목적(f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은 권리 그 자체(인권알기, 누리기)</li> <li>- 인권을 누리며 다르게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학습</li> </ul>			
내용(ab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개념과 역사</li> <li>- 각종 인권관련 국내외 문헌연구</li> <li>- 인권의 내용과 향후 과제 등</li> </ul>			
방법(throug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존중 / 참여</li> </ul>			

## 2. 장애인 인권교육

### 가. 장애 인권교육? 장애분야 인권교육? 장애인 인권교육?

보통 어떤 명칭을 만들 때는 그 명칭을 사용하는 목적이나 그 명칭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의 핵심적인 단어를 이용하는데, 교육과 만나는 단어들은 대체로 교육의 대상자(피교육생)거나 교육의 목적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교육이라 하면 대부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또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하는 인권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장애인이 진행하는 교육으로도 생각되어 진다.<sup>8)</sup>

그런데 장애인 인권교육과 함께 ‘장애인권교육’, ‘장애분야 인권교육’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전통적으로 ‘장애’는 개인의 상태였다. 눈이 보이지 않거나 귀가 들리지 않거나 입으로 말하지 못하거나 다리로 걷지 못하는 것이 장애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기능 손상이나 상실이라는 개인적인 상태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식하면서 장애의 개념은 개인의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특징을 수용하지 못하여 어떠한 제약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환경, 주변의 상태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1987년 처음 그 논의를 시작하여 2001년 12월에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이러한 장애개념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전문(前文)에서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sup>9)</sup>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장애의 개념 속에 등장하는 개인의 특성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 손상이나 상실 뿐 아니라 제약의 원인이 되는 어떤 사람의 외모 등 신체조건, 성적지향,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가족형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고, 이러한 차이를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제약은 장애로 인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 손상이나 상실을 있는 사람 외에 당시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에 속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들 또한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기능 손상과 상실’을 전제로 한다.<sup>10)</sup> 따라서 법률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주에는 확장된 장애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체적·정신적 기능 손상이나 상실’이라는 특성뿐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특성

8) 사실 교육을 진행하는 주체를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우는 매우 적으나 당사자가 가장 효과적인 내용 전달자라는 생각 때문에 장애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당사자가 진행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9)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총론(Preamble), 전문(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e) Recognizing that disability is an evolving concept and that disability result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persons with impairments and attitudin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that hinders their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on an equal basis with others,

10)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의 다름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없애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차별적 태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 인권교육’ 또는 ‘장애분야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의에 낯설고, 장애 그 자체가 아닌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차별의 결과를 낳는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가 조력자 또는 참여자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하여, 불쌍한 시선과 선심에서 나오는 배려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장애 또는 장애분야 인권교육이라는 말 대신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는 말을 쓰기로 한다.<sup>11)</sup>

## 나. 장애인 인권교육 이해

### 1) 교육의 의미

누구나 동의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차별금지를 위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권교육’의 하위개념 또는 인권교육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 인권교육’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권을 위하여, 교육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인권상황,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장애 또는 장애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인권교육이 진정으로 ‘인권교육’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라는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풍부한 인권감수성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가끔 장애인에 대한 차별예방을 목적으로 관련 법령,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칙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법 교육, 장애인복지법 등을 근거로 하는 장애유형별 특성과 응대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심지어 장애인의 불편함과 비장애인의 다름만을 강조하여 특별히 배려할 것을 요청하는 교육, 모든 사람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만 구분하여 다른 사람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관점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 하는 교육 등을 인권교육이라고

11) 장애인 인권교육과 마찬가지로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성소수자 등의 인권교육처럼 당사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여전히 각 당사자에게 향해 있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각 당사자의 인권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당사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의 방법을 고민하기 위함이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 2) 교육의 목적<sup>12)</sup>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교육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막고 있는 몇 개의 장벽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환경이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거의 모든 의식주를 비롯한 주변 환경은 그것을 기획하고 만드는 비장애인 성인 남성중심으로 짜여 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장애인 성인 남성의 특성이 주(主)를 이루고 거기에 다른 집단<sup>13)</sup>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의식주를 생산하는데, 이때 반영되는 ‘약간의 차이’에 장애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모두를 위한 설계’(유니버설 디자인\_universal design)<sup>14)</sup> 등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변화의 모습이자 우리가 지향해야하는 사회의 모

12)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권리라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의 수단적 기능, 즉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행동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을 알게 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육 후 참가자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에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 ‘인권교육’이라는 권리를 누린 것이고,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교육의 목적 중 수단적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3) 고정적이지 않으며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지위(특정 집단의 소속여부)지만 대체로 주(主)류와 비주류 구분할 때 남성, 청장년층, 내국인, 비장애인, 이성애자, 이성(異性)인 혼인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가정, 학력이 높은 사람, 일반적으로 아름답다고 평가되거나 키가 크다고 평가되는 사람 등은 주류가 되고 여성과 트랜스젠더(transgender), 아동·청소년, 노인, 외국인(이민자), 장애인,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등 성소수자를 표현하는 영어단어 첫 글자를 모아 ‘LGBT’라고 쓰고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다.), 1인 가족을 포함하여 부부와 그 자녀라는 가족 구성원과 다른 구성원으로 이뤄진 가족(조손가정, 동성애부부가정, 청소년가정 등),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일반적으로 못생겼다고 평가되거나 키가 작다고 평가되는 사람 등은 비주류가 되는데 이러한 기준 중 비장애인이고 청장년층에 속하는 나이의 남성 외 다른 기준으로 분류된 집단을 말한다.

14) 위키백과: 유니버설 디자인(영어: universal design, 보편 설계, 보편적 설계)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미국의 로널드 메이스에 의해 처음 주장되었다. “모두를 위한 설계”(Design for All)라고도 한다. 이는 배리어 프리나 접근성 디자인, 보조과학기술로부터 나타났으며, 예를 들어 쥐는 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레버식 문 손잡이 등을 설계하는 것 등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7대 원칙>

1.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누구라도 차별감이나 불안감,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가?

① 모든 사용자들에게 같은 사용 방법을 제공하라 : 가능할 경우 똑같게, 그렇지 않을 경우 동등 하게.



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 그러므로 사적인 가치를 반영한 좋고 나쁨을 떠나 지구공동체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인권을 실천

② 가능한한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지 못할 때는 그에 상응하게 어떤 사용자든지 분리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피하라.

③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한 규정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④ 디자인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어필되도록 하라.

2. 사용상의 융통성 (flexibility in use)서두르거나, 다양한 생활환경 조건에서도 정확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

① 사용방법의 선택권을 제공한다.

② 왼손-오른손 잡이의 접근과 사용을 위한 방법을 도모하라.

③ 사용자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용이하게하라.

④ 사용자의 보조를 맞추실수있도록하라.

3.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tuitive)직감적으로 사용방법을 간단히 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사용 시 피드백이 있는가?

① 불필요한 복잡함을 제거하라.

② 사용자의 기대와 직관력에 일치되게하라.

③ 광범위한 문자와 언어 기술에 부합되도록하라.

④ 중요도에 일치하도록 정보를 정리하라.

⑤ 작업이 완료된 후나 그 진행 중이라도 실질적인 응답과 반응을 제공한다.

4. 정보 이용의 용이 (perceptive information)정보구조가 간단하고, 복수의 전달수단을 통해 정보입수가 가능한가?

①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 언어, 촉감 등을 사용하라.

② 필수적인 정보와 주변 정보와의 적절한 비교를 제공한다.

③ 필수적인 정보는 최대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

④ 묘사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그 요소를 구별하라. : 즉, 지시하거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쉽게하라.

⑤ 감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기구나 기술들에 호환성을 제공한다.

5.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사고를 방지하고, 잘못된 명령에도 원래 상태로 쉽게 복귀가 가능한가?

① 위험과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요소를 배열하라. : 대부분 쉽게 알아챌 수 있고 이미 사용된 적 있는 요소를 사용하며, 위험한 요소는 제거하거나 막아 놓을 것.

② 위험하거나 실수를 유발시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제공한다.

③ 안전성이 실패할 것을 대비하라.

④ 주의를 요하는 일에서 무의식적인 행동을 못하도록 하라.

6. 적은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무의미한 반복동작이나,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런 자세로 사용이 가능한가?

①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하라.

②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힘을 사용하라.

③ 되풀이되는 동작을 최소화하라.

④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을 최소화하라.

7.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이동이나 수납이 용이하고, 다양한 신체조건인 사용자와 도우미가 함께 사용이 가능한가?

① 중요한 요소들은 앉아있는 사람이나 서있는 사람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이도록 하라.

② 모든 물건이 앉아있는 사람이나 서있는 사람 모두에게 편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하라.

③ 손이나 손잡이 크기의 변동을 고려하라.

④ 보조장치나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한다.

하고 누리는 첫걸음이고, 결과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성까지 이해하고 반영하여 사회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인권교육의 목적이 된다.

두 번째 벽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이다. 옛날부터 잘 보고, 잘 듣고,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신체적 기능과 합리적이고 빠른 판단력은 생존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도구였다. 이런 사회에서 신체 및 정신의 기능 손상이나 상실은 저평가되고 숨기고 싶은 사실이 되었다. 그 결과 생겨난 사회로부터 격리된 집단 수용이나 집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의 감금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 손상과 상실을 보완해 줄 도구들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다양한 통로로 간접경험을 하지만 말 그대로 간접경험은 본인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틀로 사람을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간접’의 틀이 장애 또는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간접경험자도 그 틀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안타까운 것은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이 ‘간접’의 틀이 당사자 중심의 인권적 관점의 틀이 아니라 비장애인, 제3자, 그 관여도가 약한 주변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틀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 흔히 방송을 통해 그려지는 장애인은 매우 악하거나 아니면 한없이 착하고 순수한 존재로 나뉜다는 것이다. 가끔 성선설과 성악설 또는 제3의 탄생설을 고민하게 할 만큼 변화무쌍한 나와 주변의 사람들을 경험하면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변화무쌍함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미 ‘간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나의 주변에 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이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찌면 불편한 일이다. 한국어만을 사용하는 내가 중국어, 일어, 영어를 비롯하여 한 번도 듣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간다면 어떨까? 음식을 주문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가 음식을 선택하는 태도, 음식을 더욱 맛있게 먹는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식탁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성의 불편함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더욱 행복해 질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비장애인의 결정에 의한 집단 수용이나 외출 금지로 인하여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다양성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 모든 사람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5)</sup> 이러한 기회의 상실은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낳고,

15) 법에 따른 16가지 장애유형은 편의에 따른 아주 넓은 범주의 구분이다. 각 유형에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없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듯 장애인 당사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사람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학습된 편견은 어느덧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고 전해진다. 비장애인 성인 중심의 경쟁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많고,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다양한 제약들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없애는 것 또한 인권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개의 벽이 사라지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과연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의 해소만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까? 그들은 스스로를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아니다.’이다.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만으로는 그가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교육의 효과로 그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동정하여 특별히 배려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러한 행위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거나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이러한 특정 분야 또는 특정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폭을 넓혀 인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삶의 철학으로 받아드려 지구공동체에서 다르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부추기고 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3) 교육의 내용

가) 교육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

① 인권의 개념과 역사, 변화과정, 인권의 내용(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관련 국내외 규정 등)

- 나와 인권은 어떤 관계인가?
- 인권의 정의, 가치는 무엇인가?
- 인권사상은 언제부터 생겨났으며 인권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해 왔는가?
- 동서양의 인권사상의 발생시점과 변화,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는 무엇인가?
- 세계인권선언의 시작과 내용은 무엇인가?
- 각종 인권관련 국내외 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현재 한국사회의 인권은 어떤 모습인가?
- 인권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차별과 차이는 무엇인가?(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 인권과 자연, 환경은 어떠한 관계인가?

- 다르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정부, 시민사회단체, 개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제기구, 국가인권기구 등)

②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이론적 이해, 정신적, 신체적 기능 손상 또는 상실의 개념과 특성

- 장애의 개념(법률, 학설, 일상생활 속의 개념)
- 장애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차이점
- 정신적, 신체적 기능 손상과 상실의 의미와 특성
- 정신적, 신체적 특성에 따른 태도 또는 생활방식의 차이

③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 차별사례

-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 편견
- 문화(생활양식, 예술, 언어 등) 속 장애인 차별
- 법과 제도 속 차별

④ 장애, 장애인 관련법과 제도

-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그 외 법률과 제도

⑤ 인권감수성

- 지구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시선(관점)
- 평화와 공존, 비폭력, 갈등이해
- 다양한 사람들과 다르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연대

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표와 같다.

시간	목표	내용
1차시	인권의 이해 차이와 차별의 이해	1. ‘인권’의 역사 2.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알아보는 인권의 내용과 의미 3. 차이와 차별 이해하기
2차시	장애 개념 알기 1	1. 장애개념의 변화(전통적~현대적) 2. 법과 제도 속 장애의 개념(유형 및 특성) 3. 문화 속 장애의 개념
3차시	장애 개념 알기 2	1.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권 현황(관련 주요이슈) - 사회의 장애인식 정도(장애 누구의 문제인가?) - 장애, 비장애의 통합과 분리 - 장애+a(성별, 나이, 국적 등등) - 장애와 사회복지서비스 2. 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와 현재
4차시	장애인 인권관련 규정 알기	1. 장애인권리협약 2. 장애인차별금지법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5차시	장애 감수성 훈련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19가지 차별사유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외모 등 신체조건, 학력, 가족형태 등 2. 차별사례 연습 -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진정사례를 통한 장애차별의 이해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름에 대한 감수성 훈련

위 과정은 교육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시간과 내용을 조절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차시는 최소 2시간에서 4시간으로 구성하여 강의, 동영상 시청, 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참여자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각 주제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의 생각에 대한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인권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위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전부 진행할 수 없다면, 각 참여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2시간 전후의 특강형태로 내용을 압축하여 전달할 수 있다.

#### 4) 교육의 방법

##### 가) 누가

장애인 인권교육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누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은 장애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으로서의 교육, 장애인 인권단체(인권교육단체) 등의 활동가들에 의한 인권운동으로서의 교육 등을 구분하여 그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강사<sup>16)</sup>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인권교육의 개념을 설명할 때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개별 영역에 대한 인권 교육의 필요성만큼 부각되고 있는 것이 당사자의 교육 참여다. 즉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고, 여성이 여성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성소수자가 직접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상황에 대한 경험이나 판단은 가치나 효용성과는 별개로 그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어떤 상황에 대한 당사자인 그가 그의 느낌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sup>17)</sup> 이것이 바로 당사자가 장애인 인권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장애 또는 장애인의 개념 변화, 그 동안의 연구 또는 학습을 통해 알려진 장애의 특성이나 차별사례 등을 비장애인이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당사자의 관점, 당사자의 경험,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인권 교육은 앞서 교육의 목적에서 이야기 했던 ‘간접’의 틀로 장애인의 인권을 되풀이 하여 말하는 것이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인권교육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참여는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만이 경험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남아 있다고 해도, 그 순간 그 공간에 있지 않고서야 그 상황을 모든 감각으로 받아드릴 수 없으며, 더욱이 같은 순간, 같은 공간에 있다하더라도 그들을 이루고 있는 그 동안의 다른 경험들이 느낌이나 판단의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해와 공감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이해와 공감이 본질적으로 물리적, 실체적<sup>18)</sup>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 속성적 행위라는 것을 설명한다. 개인의 자발적 의지로 이해와 공감을 선택하는 순간 그 실체와는 무관하게 이해와 공감의 대상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16) 여기서 말하는 강사는 청중 즉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일(一)대 다(多)의 방법으로 지식 또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꾼 또는 모데레이터(modertor)로서 참여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인권과 연결시켜주고,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언어로 표현하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17)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당사자의 판단이 늘 합리적이며, 처한 상황을 개선하거나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좋은 해결책 또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인과관계를 가진 인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은 때때로 왜곡될 수 있고, 제3자가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당사자의 잘못된 판단은 오히려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정체시키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당사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는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행동 또는 주변의 응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18) 네이머 칸트사전, 실체[實體, Substanz, substantia] Substanz라는 말이 sub-stare=darunterstehen에서 유래한다는 것이 보여주듯이 예부터 실체란 현상의 변화 근저에 놓여 있는 무언가 항존적·지속적·자존적인 것이고 다양한 현상(속성)은 그 변용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칸트에서의 실체 개념은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범주로서 경험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질서 기능을 수행한다.

때론 그 입장에 대한 어떠한 가치 평가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교육의 진행자, 즉 비장애인인 나의 경험과 태도, 나의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인권은 장애가 있는 당자가 직접 주체가 되어 이야기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으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치열하게 당사자의 인권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참여 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전제 조건 또는 장치가 있는데, 바로 강의 진행자인 당사자가 충분히 인권을 이해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당사자는 인권교육에 있어 보조인의 역할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전달자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권에 대한 이해의 부족, 낮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은 인권교육 자체를 의미 없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장애인 인권교육은 장애인 당사자만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강사로서의 당사자 참여, 당사자 관점의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끝으로 ‘누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고민을 이야기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인권교육을 받기 위해 기획하고 준비하는 주체는 장애가 있는 강사(인권교육 진행자)의 존재를 얼마나 인식하고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존재의 인식과 반영은 교육의 목적, 장소, 시간, 기자재의 준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장애가 있는 강사에 대한 참여자들의 편견 없는 수용이다. 편견 없는 수용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와 강사 모두의 의지와 태도다.

#### 나) 어떻게

당연히 인권교육은 참여자와의 자유로운 소통을 전제로, 존중과 배려의 환경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인권을 통한’교육이라고 설명한다.

- ① 학습목표는 최대한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할 것
- ② 과도한 교육기법을 사용하거나 엽매이지 말 것
- ③ 적절한 동기 유발, 참여자의 자율적 참여, 다양한 매체활용 등을 통해 참여하고 싶은 교육, 재미있는 교육으로 구성할 것
- ④ 가능하면 참여자 개개인의 성향을 반영하여, 과도한 요구를 하지 말 것<sup>19)</sup>

19) 다른 당사자 인권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의 진행을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권교육이 참여자들과의 소통으로 진행될 때, 그들의 소통방식은 그들의 특성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의 방법 중 가장 흔한 것이 청각과 시각을 통한 소통인데,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인 청각, 시각의 방식으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신체적인 것뿐 아니라 참여자

⑤ 책임의 추궁, 비난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 것

⑥ 마찬가지로 특정 당사자 집단에 대한 불필요한 동정심 유발 등 참여자의 인성(또는 도덕)에 의지하지 말 것<sup>20)</sup>

#### 5) 교육의 참여자

거의 모든 교육은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정하여 진행된다. 하지만 참여자들의 공통점이 많고 적고를 떠나 교육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사전에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장치를 통해 참여자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 심지어 구체적인 교육목적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참여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때 비로소 인권교육은 ‘통한’교육이 된다. 장애인 인권교육에서 고려해야 하는 참여자의 특성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장애유무: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의 유무는 인권교육의 내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도 본인의 장애 외에는 낮은 영역이고, 인권에 대한 이해나 실천은 누구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표현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수동적이거나 의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동정적 관점의 이야기가 교육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이런 교육은 오히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당장은 장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관련 법령을 이해하며, 권리를 누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의 경우 다른 차별사유<sup>21)</sup>와 달리 지속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

의 언어, 표현방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20) 자유권의 시대를 지나 사회권이 권리로 인식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제 중 하나는 ‘사람의 성품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인권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변화무쌍한 사람의 마음에 기대어 얻는 것은 너무도 막연하며 불확실한 우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맡기는 일이다. 물론 결정권자들의 지나친 적대감이나 무지로 인해 인권의 주체로서 인식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 적대감이나 무지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략적으로 결정권자의 동정에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발현된 동정심이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러므로 나는 우월하며 매우 친절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오히려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요청해야 하는 동정심은 “나와 그는 모두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그와 연대한다.”는 생각에 출발점을 두고 있는 ‘연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다.

2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사유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기준등록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



고, 외부와의 소통도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차별의 개념이나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장애가 있고 없고는 인권교육의 내용뿐 아니라 교육의 방식과 교육의 시간을 구성할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당장 장애의 유형에 따라 소통의 방식이 다르고,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 기능 손상이나 상실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연령: 아동·청소년(교육과정에서의 통합교육), 중장년층, 노년층

거의 모든 교육에서 고려되는 참여자의 특성은 나이다. 나이는 참여자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방식, 경험의 내용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 또한 참여자가 소통하는 사회의 인식이 개인의 인식으로도 반영되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다면 매우 어려운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다.

다) 인권보호 및 증진에 대한 참여 정도: 장애인 인권옹호자, 그 외 사람들

참여하는 사람이 인권교육을 통해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집단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냐는 교육의 효과, 즉 교육 후 생각이나 행동의 모습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참여자의 성향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라) 정당한 편의제공 등에 대한 의무 유무: 의무자, 의무자의 역할에 대한 지지자 또는 감시자(비의무자 또는 권리자)

인권의 발전과정에서 자유권이 가장 먼저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권리를 누리하고자 하는 사람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즉 의무자가 비교적 명확했다는 것에 있다. 공권력으로부터의 신체의 자유, 정치 참여 등을 보장하고 증진해야하는 것이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권의 보장과 보호를 위해서는 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의무자가 얼마나 권리자의 특성과 권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sup>22)</sup>에서도 교사, 교원, 공무원, 법집

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이다.

- 22) 2004. 12. 10. 유엔 총회 결의(59/113)에 근거하여 모든 사회분야에서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이행을 발전시키고자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2005 - 계속)을 수립하였다. 이 세계프로그램의 조정 및 운영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가 담당하고 있다. 유엔 인권교육 10년(1995-2004)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확대된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인권교육의 기본적 원칙과 방법론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증진을 꾀하고 있다. 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세부 분야 및 쟁점에 대한 국가적 인권교육에 대한 노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연속적인 단계로 구조화된 운영방식으로 고안되었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에서는 초·중등학교과정 내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5)의 초점은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 및 교사, 교

행자 등 의무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III. 장애인 인권교육 연습

#### 1. 교육대상 및 특징: 정당한 편의제공 등의 의무자(공무원 대상)

#### 2. 교육제목: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의 이해

#### 3. 교육목적 및 필요성: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의무 이행

가. 인권 관점의 행정운영능력 필요, 인권은 21c 주요 화두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19가지 차별사유 중 ‘장애’만이 별도의 법률로 제정, 장애는 당사자의 일생에 걸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이유가 됨

다.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실효적 이행

라. 복지업무 강화, 장애영역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

#### 4. 교육방식: 2시간 인권특강

#### 5. 교육내용

##### 가. 장애의 개념

1) 전통적 개념과 현재적 개념: 장애는 개인적 문제, 당사자와 가족만의 문제, 사회의 문제

2) 법률에 나타난 장애인의 개념

가) 장애인권리협약: ‘장애’라는 개념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

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명시

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의미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의미한다고 규정

### 3) 장애인과 장애가 있는 사람

가)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면서 굳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음. 나 또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 그리고 그냥 사람이면 충분함. 누군가가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 인사를 나눌 때도 그 사람의 신체적 특성을 꼭 알아야할 필요는 없음. 적절한 응대를 위해 그가 불편해 하는 것, 그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지만 장애유형이나 등급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 ‘장애인’에 대한 소속감, 장애가 있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차별상황에서 이야기 되는 ‘장애인’에 포함되고 싶은 사람은 없음

나) 그러나 정부는 특정집단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과 같은 말을 만들어 내고<sup>23)</sup>, 사회학, 심리학 등을 연구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본인들이 발견하거나 생각해낸 특성을 담아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는 이름을 짓거나 이미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을 끌어 쓰기도 함. 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개인 또는 집단의 생각이고, 법과 제도 속의 표현이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고, 사람들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호칭이 허용되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굳이 ‘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는 없음

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하나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처럼 부득이 사용해야할 때도 있음. 하지만 평소 ‘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장애’라는 말에 집중하게 하지 말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쓰고 말함으로써 ‘장애’라는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그 ‘사람’의 인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sup>24)</sup>

23) 소위 문둥이라고 불리던 환자와 그 가족들을 굳이 통칭하여 ‘한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센인에 대한 지원과 차별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서라고 한다.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확대하여 구별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여전히 들기는 하지만, 법적용을 위한 구별과 분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24) 이것은 ‘문제야’라는 말을 ‘문제 행동’과 ‘사람’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사

라) 그렇다고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표현으로써 ‘장애인’이라는 말의 사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장애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장애와 자부심(Disabled and Proud)’이라는 모임에서는 ‘Disability Pride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인 부분에서의 다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장애가 다양한 사람의 모습 중에 일부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공표하는 것이고, 장애에 낙인을 두는 사회구조에 대한 도전이며, 오랫동안 장애억압적인 사회가 규정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믿음과 느낌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려는 시도인 것이다.’라고 정의한바 있음.<sup>25)</sup> 이러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장애인’이라 부르며 ‘장애에 낙인을 두는 사회구조’에 도전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이라는 말은 신념과 실천의 의지이므로 존중해야 함

#### 나.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진실(실제와 편견)

##### 1)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1. 말, 언어

장님, 봉사, 병신, 불구자, 비정상인, 장애자, 지체부자유자, 폐질자, 앓은뱅이, 절름발이, 절뚝발이, 찌파, 반신불수, 외다리, 외팔이, 곰배팔이, 육손이, 병어리, 귀머거리, 애꾸, 외눈박이, 사팔, 정신박약아, 꼽추, 정박아, 등신, 또라이, 백치, 바보천치, 얼간이,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 땅딸보, 난쟁이, 언청이, 언청샌님, 찌보, 배넛병신, 흑부리, 문둥이, 나병환자

##### 2)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2. 방송

- 일반적 시각: 지적장애인은 순진하고, 어리숙하다. 지체장애인 등은 타인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장애인은 신경질적이다.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고, 무능하다. 정신질환자는 매우 위험한 존재,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 장애인을 나쁜 사람의 이미지로 그릴 때가 있다. ‘후크는 나쁘다.’

- 장애를 비정상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한다. ‘절름발이 영어는 이제 그만!’

---

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행동을 그 사람 자체와 혼동함으로써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 하지만 문제라고 생각되는 개별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오랜 시간동안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의외로 아주 간단하고,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개별 행동의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 인권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25) ‘인권교육의 현장 성찰과 패러다임의 변화’ 김형수, 2013년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27쪽 내용 재인용(국가인권위원회).

- 장애를 질병과 혼동하여 사용한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 장애보장구에 대한 잘못된 표현 ‘휠체어에 의존하고 있는 어머니’(안경을 낀 사람은 안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안경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임.)

### 3)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3. 제도(법령)

- 정신병자는 의회방청 불가, 공원입장 불가
-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직업선택의 제한사유로 기재 등

## 다. 장애인 인권관련 규정

### 1) 장애인권리협약

가)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제61차 UN총회에 상정되어 2006년 12월 13일 오전 10시(뉴욕 현지 시간)에 만장일치로 채택

나)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6차 UN 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파크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 권익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효성 있게 전 세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감독하도록 규정

### 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내용

- 본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당사국들은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보장하며, 기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성취하여야 한다.

-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정보, 의사소통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장애인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당사국들은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무력분쟁 등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에서 착취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지원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아래 가정을 꾸리고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근로 환경 및 고용조건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며, 그들이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각국은 본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며, 국내에 전담부서 및 독립기구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 나아가 국제협력을 통하여 장애인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각국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라) 선택의정서

- 본 의정서는 당사국의 협약위반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한 개인청원을 인정한다.

### 2) 장애인차별금지법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가능
-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법 제정운동을 하고 입법과정에 참여
- ‘시혜에서 인권으로’ 패러다임의 변화

다) 적용대상: 장애인,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이 정당한 사용

라) 차별유형: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마) 차별금지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  
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장애여성 및 장  
애아동 등

바) 차별예외: 진정직업자격, 과도한 비용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사) 권리구제 절차: 차별시정기구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시정명령

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

#### 라. 인권감수성(장애감수성)

1) 인권감수성이란? 인권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서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 나아가, 우리의 일상 현실을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인권 문제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능력, 그리고 인권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 등을 포함

2) 장애감수성 키우기(연습)

#### 마. 평가, 마무리

교육 후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인 교육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부담스럽  
지 않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 교육을 위해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IV. 마무리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sup>26)</sup>이라는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배움과 배움의 도움꾼이 된다

---

26) 간디학교 교가, ‘꿈꾸지 않으면’ 작사 양희창, 작곡 장혜선.

는 것은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새로운 마음과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가르친다는 것을 인권교육의 강사의 역할이라고 볼 때 ‘희망을 노래한다.’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효과가 참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으나 장애인 인권교육 현장에서 계속 논의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 1. 장애인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적인가?

- 인권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말과 영상, 그 외 자료들은 인권적인가?
- 차별사례의 종류, 내용, 활용 방식은 어떤 의도로 구성되었는가?

### 2. 장애인 인권교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가?

-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가?
-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인권교육 강사간 소통은 필요한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 3. 장애인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그 결과 활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교육 모니터링의 주체는 누구인가?
- 각 교육주체간 모니터링 결과의 공유는 필요한가?
- 결과를 교육내용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4.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

- 지적장애인의 의학적 학습능력 정도를 인권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내용을 누가 결정하여 만들 것인가?(당사자 참여의 가능성은 있는가?)